

Policy

ISS

2018
정책이슈리포트

경북형 청년 귀촌 모델 구축 및
공모사업 추진 방향

U

E

REPORT

경북형 청년 귀촌 모델 구축 및 공모사업 추진 방향

연 구 진

김 필 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 인 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장 인 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CONTENTS

I) 도내 현황 분석

II) 귀촌 관련 정책

- 1. 중앙정부의 귀촌 정책 사례 09
- 2. 지자체 귀촌 정책 사례 11
- 3. 귀농·귀촌 정책의 시사점 14

III) 경북형 청년 귀촌 모델 개발

- 1. 청년 귀촌모델의 유형분류 15
- 2. 청년 귀촌모델의 단계별 추진전략 21

IV) 시군 공모사업 추진 방향

- 1. 기본 방향 27
- 2. 시군 공모사업 추진 방향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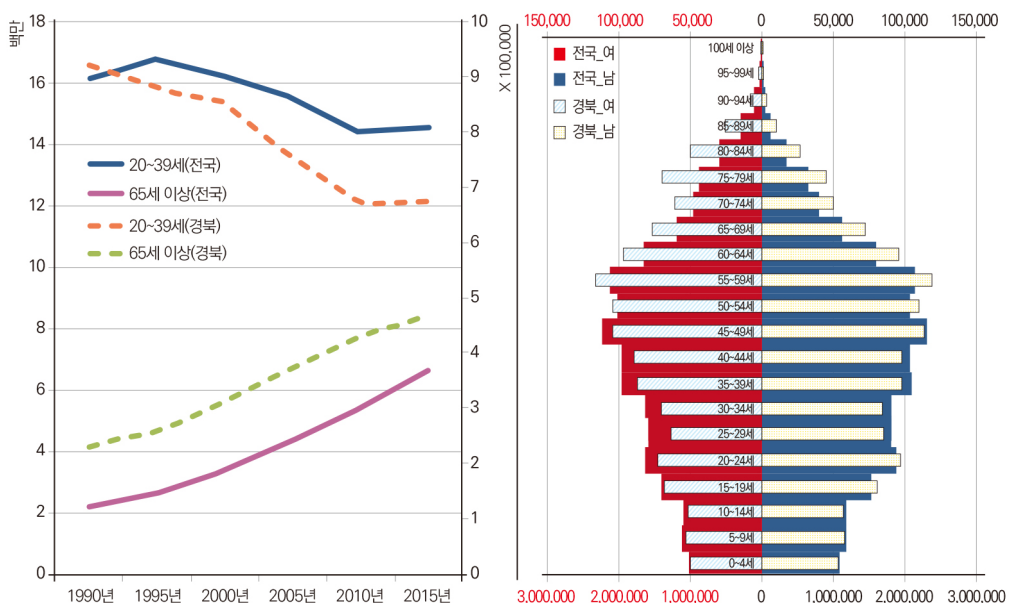


I 도내 현황 분석

경상북도 인구구조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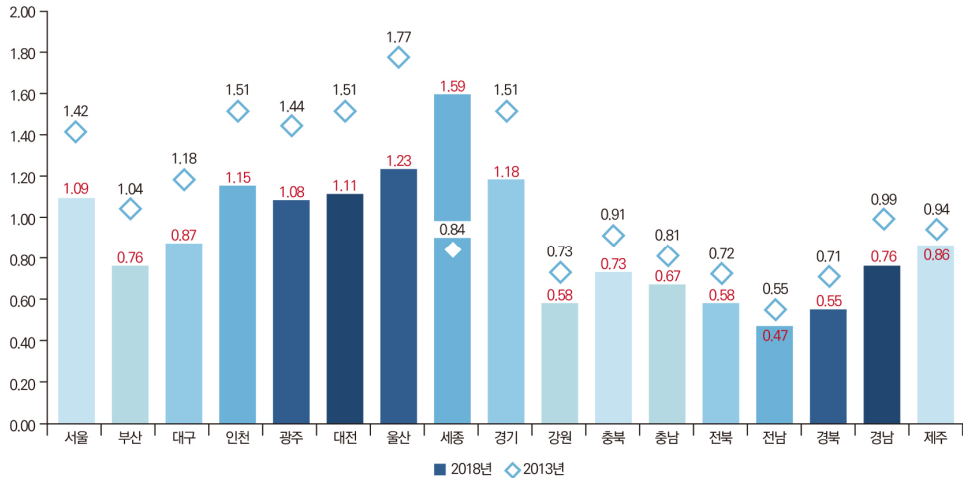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고령화와 인구감소,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음
-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지속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인구변동 추이는 이를 더욱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경북지역 인구변동 추이 및 인구피라미드



- 위의 그림에서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9세의 인구변동은 전국적으로는 2000년 인구총조사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있고 20년간 15% 가량 감소한 반면, 농업비율이 높은 경북지역은 27% 가량 감소하는 등 더욱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임
-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인구피라미드에서도 경북지역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0세에서 49세까지 전국 인구피라미드 모형보다 좁게 나타나고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보다 넓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 ▮



▮ 시군별 소멸위험지역 개소 ▮

시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멸위험 시군	3	2	3	10	5	10	10	16	19	11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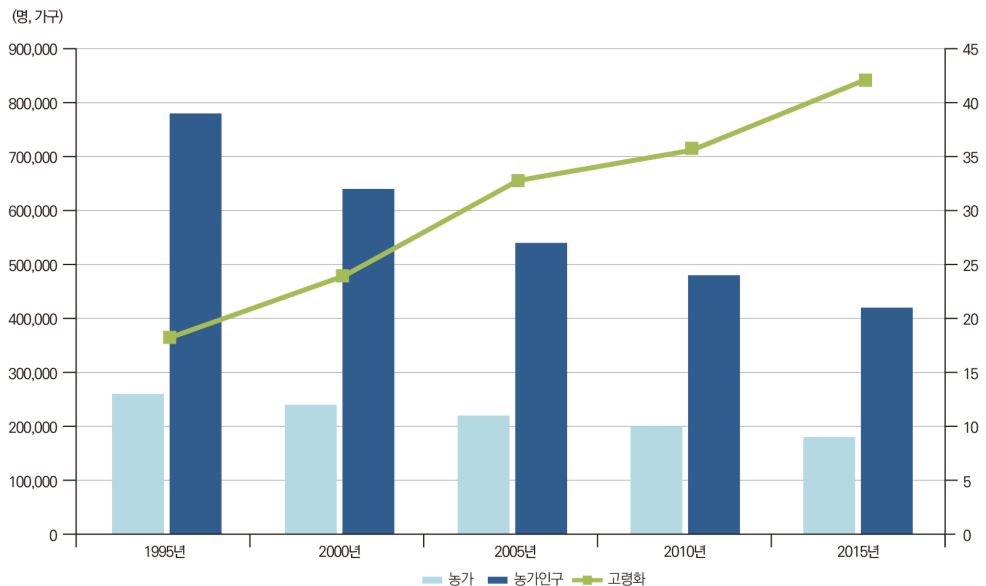
- 지방소멸위험을 나타내는 소멸위험지수에서도 경상북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소멸위험 지역 89개 시군 중에서 경상북도가 19개로 가장 많고, 시도별 소멸위험지수도 0.55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한국고용정보원, 2018)

* 소멸위험지수 : $(20\sim39\text{세 여성인구수} / 65\text{세 이상 고령인구수})$ 로 나타내며 단순화된 조건을 가정할 때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지역은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함

경상북도 농촌 인구 변화 추이

- 이러한 인구구조의 악화와 함께 농가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농업총조사 기준 경북의 농가는 184,642가구, 인구는 410,14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1995년과 비교하여 보면 농가는 28.8%, 농가인구는 4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가의 규모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농가의 고령인구 진행속도 또한 1995년 18.3%에서 '15년 42%로 그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음

연도별 농가 및 농가인구, 고령화율 변화 추이



- 농촌 인구 중 15세 이상이 농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인구는 1995년(443,380명)에 비해 27.8% 감소한 320,301명으로 나타났음
- 농경지 면적은 2015년 12월 1일 현재 198,101ha이고 0.5ha 미만 경영하는 농가는 1995년에 비해 5.1%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령가구의 경지 축소, 도시근교 출입경작농가의 증가 등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짐
 - 3.0ha 이상 경영하는 농가도 1995년(20년 전)에 비해 63.2% 증가하여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가를 농업 경영형태별로 보면 논벼가 34.5%, 과수 30.2%, 채소 15.7%, 식량작물 8.7% 순으로 나타났는데, 1995년과 비교하면 특용작물(58.3%), 축산(57.8%)농가는 감소하였고, 기타작물(323.4%), 관상작물(316.8%), 식량작물(129.8%)농가는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구조에도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가축사육 농가는 사육규모의 대형화 영향으로 소규모 농가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사육마릿수는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증가 영향으로 1995년(20년 전)에 비해 돼지(33.5%), 닭(65.6%), 오리(30.1%)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5년 농축산물 판매 규모를 보면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영세농가가 전체의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판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1995년 237가구에서 2015년 4,788가구로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표를 살펴보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경북지역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농업 소득을 살펴보면 2016년에 2006년 대비 4.2%, 2014년 대비 21.8% 감소하는 등 농업소득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경북지역의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2.9%로 전국 평균 41.0%에 비해 8% 가량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인 개별농업에 치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시사점 및 연구의 필요성

- 인구구조의 변화와 농업분야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고령화와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업분야의 저소득화, 생활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귀농·귀촌 인구 또한 2016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은퇴 이후 혹은 조기 은퇴 등의 사유로 귀촌한 50세 이상의 비율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귀농 인구 또한 고령층이 대부분임
- 따라서 젊고 유능한 청년층의 귀촌을 유도하여 농산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개별농업,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협동농업, 청년층의 유입 등을 통해 인력을 재구성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경상북도 민선 7기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서도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고소득 농산어업, 농산어업의 6차 산업화,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청년층의 귀촌 유도가 더욱 필요할 것임

II 귀촌 관련 정책

1. 중앙정부의 귀촌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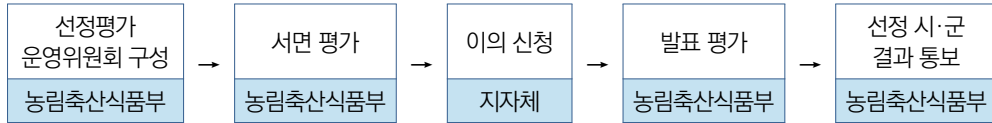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농림부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의 활력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자금은 3억 원 한도로 농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고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의 선정은 연 2회 상·하반기에 각각 시행하고 2019년부터는 사업계획, 추진 의지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선정되는 등 선정기준을 강화하되 대상자가 보다 귀농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 농림부의 또 다른 귀농·귀촌 정책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 제고 및 귀농·귀촌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도시민 유치 의지가 높은 전국 72개 지자체(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를 선정하여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중양정부의 귀촌 정책 사업 추진체계



- 2019년부터는 주민 융화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비 비중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귀농·귀촌 초기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고 있음
- 귀농 희망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

귀농 희망 도시민 이주단계별 프로그램

단계	프로그램
STEP. 01 정주의향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인상담(방문, 전화, 인터넷 등) - 귀농·귀촌 포털(홈페이지), SNS 등 개설 및 운영 - 귀농·귀촌인 DB구축 및 유대 강화 - 귀농·귀촌 정착 매뉴얼 제공 •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 귀농·귀촌 안내 자료 및 홍보물 제작 -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현장 홍보
STEP. 02 이주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귀농인 농사체험 및 지역 탐색 투어 - 귀농·귀촌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 빈집, 농지 등 주거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택지, 빈집정보 등 거주시설 안내 - 농지, 주요 재배품목 등 지역 특징 안내
STEP. 03 이주실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실행 유도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창업 및 주택 용자 등 지원정책 안내 - 사기 피해 예방 안내 및 교육 운영 - 유형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정착 교육 - 관내 일자리 및 채용 정보 안내
STEP. 04 이주정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처 적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 융합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인 일자리 정보 DB 구축 및 연계 - 학습동아리, 지역민과의 동호회, 멘토링 지원 -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참여 활동 지원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 농림부의 또 다른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인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촉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본 사업은 18~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청년 영농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다른 직업이 있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적인 청년영농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중임
- 지원 세부내용은 영농정착지원금으로 1~3년간 월 80~100만 원으로 영농 독립경영의 기간에 따라 상이하고 지원대상자는 의무 영농기간을 준수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사업지원 만료 후에도 정착지원사업을 별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지자체와 농식품부, 농정원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농지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 컨설팅 지원 등 별도의 지원사업도 본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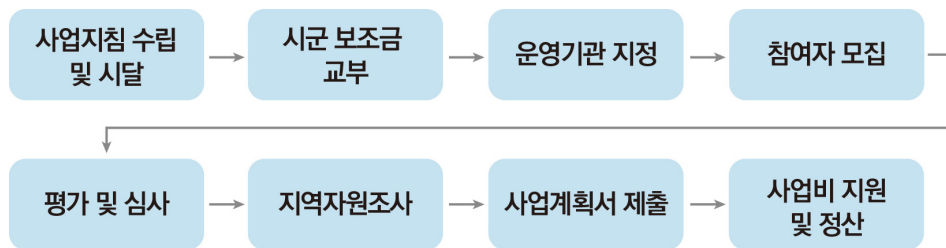
2. 지자체 귀촌 정책 사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경북)

- 경북에서는 청년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도내 청년인구가 연평균 6,500명 가량 유출되었고 경북도의 평균연령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고 도시청년의 지역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은 15세에서 39세까지 전국의 청년층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농업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청년창업, 역사탐방 등 지역에서 가능한 거의 모든 지역특화 사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짐

▣ 지자체 귀촌 정책 사업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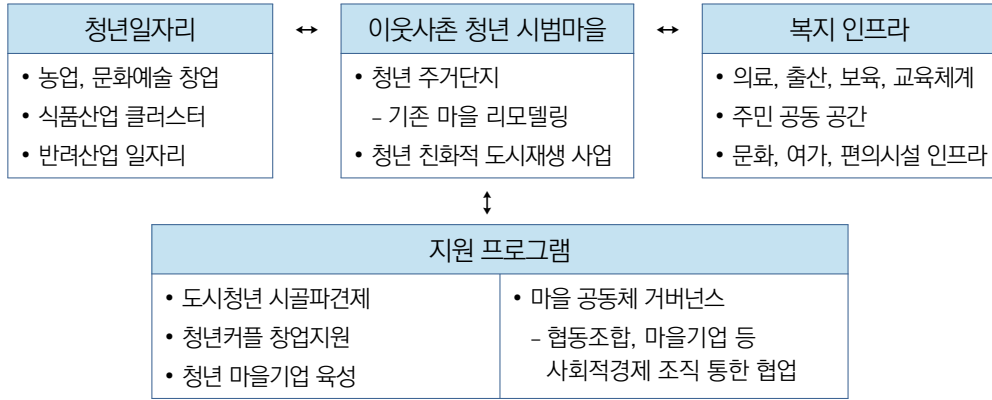


- 지원대상자는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1인당 연간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화 자금과 정착 활동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 받을 수 있음

이웃사촌 시범마을(경북)

- 경북도에서는 지방소멸 극복 및 농촌 혁신성장 기반조성을 위해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장에서 살펴보았듯 경북도내 지방소멸지수의 분포는 심각한 수준으로 군지역 생산가능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일자리와 주거복지 병행개발을 통한 농촌의 혁신 거점마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강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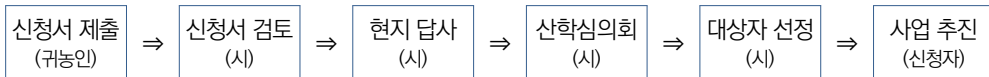
귀농인 안정정책 지원사업(경남)

- 경남도에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귀농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초기 시설자금과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책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 안정 정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시설확충 분야에서는 영농 시설과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시설확충 분야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교류협력 분야 : 귀농·귀촌 우수마을 벤치마킹, 귀농·귀촌 화합한마당, 마을 화합 및 발전 토론 등 공동 행사 추진 등 소요비용
- 본 사업 또한 65세 미만의 귀농인에 대해 지원하여 젊은 청년층의 영농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확정함으로써 지원정책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공주)

- 공주시에서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세 이상 40세 이하 젊은 청년 귀농인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청년층을 정착시켜 앞으로 농촌의 후계자로 육성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초기정착에 어려움이 큰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정착 기회를 부여하며, 우수 도시 청년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후계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
- 사업의 심의를 위해 공주시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심의회는 지역의 대학, 농업관련 단체 및 기업이 협동하여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대상자 심의를 진행함

Ⅰ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추진체계 Ⅰ



3. 귀농·귀촌 정책의 시사점

-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심화로 인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차원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지원사업이 존재하고 있음
- 전통적인 농업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농업창업이나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은 단편적이어서 경제적 기반구축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귀촌 유인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한편 농림부의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경북도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과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심각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귀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젊은 세대로서의 청년층의 귀촌을 유도하는 데에는 단편적인 보조금지원이나, 농업분야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종합적이고, 단계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III) 경북형 청년 귀촌 모델 개발

1. 청년 귀촌모델의 유형분류

- 앞서 살펴본 귀농·귀촌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로서의 청년계층이 귀촌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귀촌정책 및 모델이 필요함
-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지원 보조금의 상향과 같은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경제적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공공생활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과 같은 정착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체계적인 귀촌모델 수립을 위해 경북도내의 마을(행정리 단위)에 대한 인구, 가구 형태, 마을의 특성, 지역자원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나, 마을단위 자료의 부족, 시군의 통계자료 관리의 어려움으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경북형 청년 귀촌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농업의 6차산업, 지역 활성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기반적 차원과 인프라 기반 차원으로 구분하고, 경제기반 조성은 청년신농업형과 협동경제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인프라기반은 지역재생형, 청년SOC형 및 교육문화형으로 세부 구분하였음
- 본 경북형 청년 귀촌모델은 경제기반과 인프라기반으로 크게 분야가 구분되나, 이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청년 귀촌모델의 5가지 유형 설정

유형	개요
청년신농업형	-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을 위한 하드웨어(주거, 조직, 농지 등) 및 소프트웨어(교육, 공동체 조성 등)의 지원 또는 임대를 통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 * 농림부 귀농·귀촌종합센터 활용 및 스마트영농, 소규모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등 연계
경제 기반 협동경제형	-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마을단위가 협동하여 경제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 청년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의 마을이 귀농·귀촌인과 함께 경제적, 공동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함 *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농조합 지원 관련부처(행안부, 기재부 등)의 지원사업 및 청년지역일자리사업(행안부)과의 연계
지역재생형	- 낙후된 읍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지역을 재생시키는 유형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지원센터 등의 기관의 지원이 가능함 * 국토부/행안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인프라 기반 청년SOC형	- 지역과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생활SOC사업(공동육아시설 조성,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회복을 도모하고 동시에 생활과 환경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줄어드는 청년 인구의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과 연계
교육문화형	-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교육문화 인프라(작은도서관, 마을미술관 등)와 인력 등을 투입하여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소외 귀농·귀촌인의 참여 등 다양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농림부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연계

청년신농업형

- 청년신농업형은 자본, 기술, 연고가 없는 이른바 3無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귀농·귀촌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귀농·귀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층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기본적으로 귀촌하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하드웨어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주거,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농지, 원활한 귀촌생활을 위한 조직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 귀농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매칭시켜 활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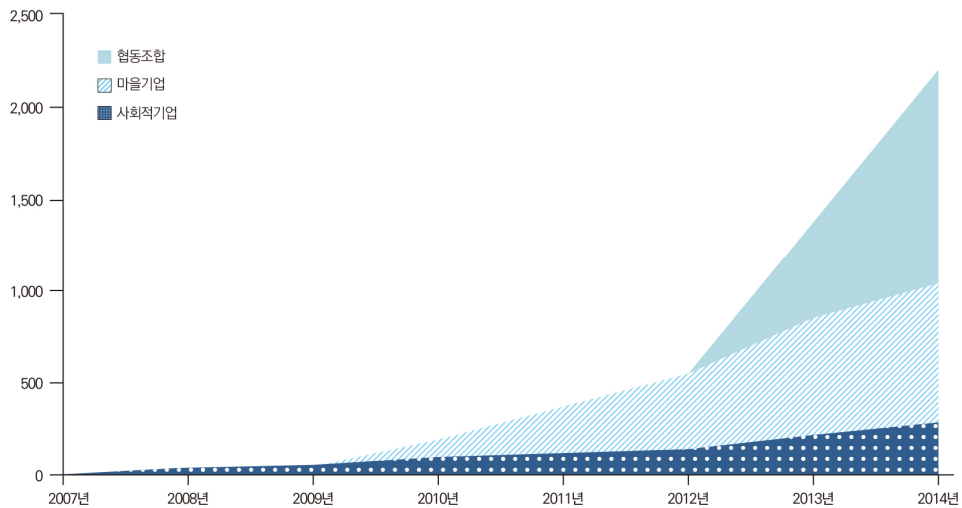
- 귀농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여 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거를 하기 위한 장소를 탐색하고 마련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연고가 없는 청년은 지역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초기 단계에서 귀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주거와 농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농업을 위한 유휴 농지 또는 주택공간을 사전에 확보 또는 연계기관을 통해 매칭시켜줌으로써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기 위한 조직의 지원은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 농림부에서 운영 중인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 준비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각종 지원 사업, 교육사업,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 대해 별도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으로써 시군과 연계하여 창업자금, 기술·경영교육 및 컨설팅, 농지 임대 및 매매 연계를 지원하는 등 건실한 경영책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음

협동경제형

- 협동경제형은 농촌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영농조합 등 마을 구성원 또는 여러 마을이 협동하여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개별 농가별 농업과는 차이를 보이는 유형임
- 이 유형은 각각의 조직이 중앙부처의 지원, 특히 초기 설립 시 인건비와 기타 경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마을 구성원과 마을 간의 협동을 통해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고 초기 설립 비용이 낮아 접근 문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음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영농조합-농림수산식품부 등 주체별로 지원 부처가 상이하여 이러한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자체에서의 선행 교육 등이 필요할 것임

- 한편, 농촌지역의 협동경제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농촌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증가 추세(누적)



자료 : 김정섭 외(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또한, 협동경제형은 청년들이 직접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기존 농촌 주민들과 함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점과 더불어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초기에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며 귀촌에 대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

지역재생형

- 지역재생형은 읍면 지역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지역 환경을 재생, 활성화하는 유형으로 신규주민의 유입감소,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지역쇠퇴 현상의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우선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지만 이를 농촌 읍면지역으로 우선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도시지역의 쇠퇴와 읍면지역의 쇠퇴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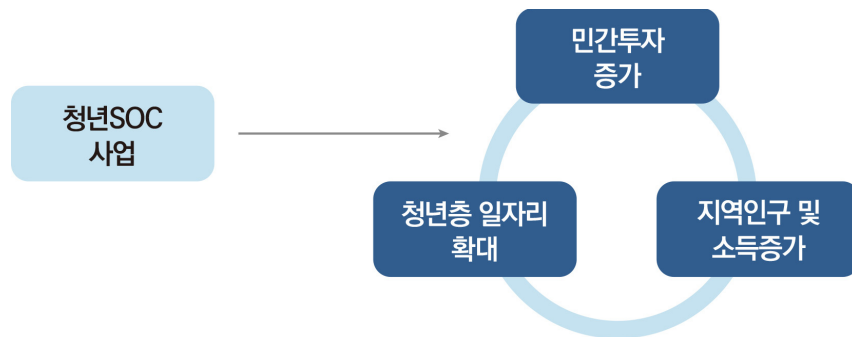
- 이에 대한 사례는 경남 함안군의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 충북 증평군의 ‘마을재생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두 사례 모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주도 농촌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만들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기존의 지역재생사업들이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온 바 있고 본 연구에서도 지역재생형을 인프라 기반으로 분류하였지만,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인프라 기반과 더불어 주민주도의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마을의 성격과 취지에 맞는 테마 선정하여 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하드웨어 계획의 수립과 함께 시군공모 시에 사업의 세부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지역재생형 귀촌 모델은 자생적 상호부조인 복지 공동체를 구성하고, 문화적으로 소통하여 주민화합 및 마을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여 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청년층이 지역에 유입된다는 것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사회에 활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나, 기존의 주민들과 융화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청년 귀촌의 의미가 퇴색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청년SOC형

- 청년SOC형은 기존의 도로, 항만, 철도 등 전통적인 SOC사업과는 달리 지역과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SOC를 중점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
- 청년SOC형에 대응하는 사업은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의 추진배경에는 고령화, 중앙집중화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에 있음

- 생활SOC사업의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이미 상주시에서 선정되어 2021년 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500여 명의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및 간접적인 일자리 등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음
- 또한 청년SOC사업 진행 간에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증가, 청년층 일자리 확대가 지역 인구 및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청년SOC사업의 순환구조



- 한편, 본 유형에서 사회간접자본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어 사업의 규모가 비대해지거나 단순히 정부 사업의 지역 유치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추진은 기반시설이 무의미하게 투자되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있음

교육문화형

- 교육문화형은 청년층의 귀촌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층의 자녀들에 발생하는 교육문제와 부족한 문화시설 등으로 여가생활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유형임
- 교육분야에서 읍면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교육협동조합이 될 수 있음. 교육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목적에 따라 학부모 또는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들이(학교가게, 방과후 돌봄교실, 교복, 학교급식, 통학버스 등) 협동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짐

- 그러나 읍면 지역의 교육문제는 이러한 단위가 큰 협동조합연합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문제를 해결 하는데 중점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인접한 여러 마을 또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영유아의 보육과 초등학교 이상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현실적으로 마을 단위로 교육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중심의 협동조합을 통해 부족한 어린이집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을 협동조합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전북 진안군의 교육협동조합인 ‘마을학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데,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청소년과 지역이 관련되어 각종 문화 프로그램, 지역 사회 공헌사업 등 읍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음
- 문화분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마을이 중심이 되는 문화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2018년에도 경북지역에 포항, 구미, 영천, 문경 등의 시 지역과 고령, 성주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문화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 청년 귀촌모델의 단계별 추진전략

- 앞서 제시한 청년 귀촌 모델의 5가지 유형을 활용하고 각 유형을 개별적 또는 호합하여 체계화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할 것임
-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4단계의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음

□ 귀촌 모델의 4단계 구성 □



- 또한 각각의 유형별로 단계별 전략을 구체화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추진 모델(안)을 구상하였음

청년신농업형 사업추진 모델(안)

구분	주요 활동
준비단계	- 농업관련기관(귀농·귀촌종합센터 등), 농촌지도자 등 방문을 통해 귀농 지원 등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귀농·귀촌 자체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관련 사례 수집 등 영농기술의 습득 - 입지조건과 농업여건을 고려한 정착지 물색 및 결정 - 농업의 특성상 즉각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작물, 소득정보 등 충분한 계획 수립을 통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실행단계	- 준비단계에서 계획한 지역과 생활경제 방식, 작목 등을 선택 - 지역으로의 이주 및 각종 신고 등의 행정처리 수행 - 초기 마을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친교활동 등의 적극적인 참여 - 선도농가 체험형 인턴, 취농 등의 예비단계 수행
활성화단계	- 준비 및 실행단계에서 계획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영농경영 컨설팅 등 자문 - 영농기반 평가를 통한 위치 파악 - 농업과 관련된 전문교육 훈련 및 농기계 임대, 임차를 통한 실전 농업 돌입
정착단계	-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문경영 및 사업의 브랜드화 - 농업인으로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기존 주민들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 및 복지과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등 수행

- 위 표의 청년신농업형의 사업추진 모델(안)은 준비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4단계로 구상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준비단계에서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등의 기관, 마을주민 및 농촌지도자 등을 방문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이와 함께 입지조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정착지와 농업의 종류, 작물을 결정하는 등 충분한 계획 수립을 토대로 귀촌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함
- 실행단계에서는 준비단계에서 구상한 계획을 바탕으로 생활방식과 농업의 종류를 최종 결정하고 지역으로의 이주 및 농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처리를 수행하며, 특히 마을주민들과의 융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활성화단계에서는 사업계획과 초기 사업수행을 토대로 영농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 전문적인 자문, 전문교육, 영농기반 평가를 통한 위치파악 등 실제적인 사업을 추진함
- 정착단계에서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문경영, 농업의 브랜드화 및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사업 등을 수행함

협동경제형 사업추진 모델(안)

구분	주요 활동
준비단계	- 협동경제 관련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존의 단체 방문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기존 조직의 자체교육, 관련 사례 조사, 조직구성과 정관 등의 작성 - 입지조건과 구성원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및 결정,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실행단계	- 준비단계에서 계획한 지역과 조직의 종류, 운영방식 등을 선택 - 지역으로의 이주 및 단체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처리 수행
활성화단계	- 준비 및 실행단계에서 계획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직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등 자문 -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인증 등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 - 조직운영과 관련된 전문교육 훈련 및 실제적인 단체의 운영 돌입
정착단계	-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문경영 및 사업의 브랜드화 - 지역의 협동경제를 위해 기존 주민들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복지과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등 수행

- 위 표의 협동경제형의 사업추진 모델(안)은 준비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4단계로 구상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준비단계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협동경제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협동경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사례조사, 정착지 결정, 충분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함
- 실행단계에서는 준비단계에서 수집한 자료와 계획을 토대로 단체 설립을 위한 사전 행정처리를 수행함

- 활성화단계에서는 준비단계와 실행단계에서 계획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행정처리를 통해 단체를 설립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인 조직의 운영을 도모하고 조직운영과 관련하여서도 관련기관의 전문 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제적인 조직의 운영에 돌입함
- 정착단계에서는 단순한 조직이 아닌 협동경제에 입각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주민들과의 협력사업 등 마을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

지역재생형 사업추진 모델(안)

구분	주요 활동
준비단계	- 지역의 문제점과 지역재생에 필요한 활동, 자원 등을 사전에 파악 - 지역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물색하고 주민공동체, 조직을 활용하여 해당 마을,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지역과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의 준비
실행단계	- 정부의 지역재생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원정책 등을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 - 주민조직의 소규모 공동활동의 추진,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 가능한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받는 등의 활동 시행
활성화단계	- 사업 선정 이후 준비 및 실행단계에서 계획한 사업계획과 지자체의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의 조직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자문
정착단계	- 지원 사업의 고도화를 계획하고 사업 종료 이후의 새로운 목표 및 사업의 창출을 위한 노력, 지역재생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타 지역에 확산 가능하도록 활동, 지역사회브랜드 등 마케팅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임

- 위 표의 지역재생형의 사업추진 모델(안)은 준비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4단계로 구상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준비단계에서는 지역의 현재 문제점과 필요한 활동, 자원 등을 파악하여 지역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물색하고 주민공동체와 조직을 구상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실행단계에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지역재생사업 등의 지원정책을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역에서는 주민조직의 소규모 공동활동의 추진,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가능한 경우에는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을 검토하는 등의 활동을 시행함

- 활성화단계에서는 사업 선정 이후의 준비 및 실행단계에서 계획한 사업계획과 지자체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조직운영에 돌입함
- 정착단계에서는 지원사업의 고도화 및 사업 종료 이후의 새로운 지역의 목표와 사업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재생 사업이 지속가능하며 모범사례로써 타 지역에도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청년SOC형 사업추진 모델(안) ▣

구분	주요 활동
준비단계	- 정부의 생활SOC사업 추진사항 확인,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사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관련 사례 조사, 조직구성과 정관 등의 작성
실행단계	- 준비단계에서 계획한 지역과 사업의 종류, 운영방식 등을 선택 - 정부의 SOC관련사업, 지원정책 등을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
활성화단계	- 준비 및 실행단계에서 계획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직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등 자문 - 조직운영과 관련된 전문교육 훈련 및 실제적인 단체의 운영 돌입
정착단계	- 사업 선정 이후 인프라의 향후 활용 방안 모색 - 인프라에 대한 지역의 합의, 이를 활용한 청년 인구의 유입방안, 지역 및 마을 주민 간의 협력을 도모

- 위 표의 청년SOC형의 사업추진 모델(안)은 준비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4단계로 구상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준비단계에서는 정부의 생활SOC사업의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사항 파악을 통해 사업 신청 준비를 수행함. 다만 생활SOC사업 중 지역의 청년인구 해결을 위한 사업에 치중하고, 지역재생형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함
- 실행단계에서는 준비단계에서 계획한 사항을 토대로 청년SOC와 관련된 지원정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함
- 활성화단계에서는 사업 선정 이후 지역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문교육 훈련 등을 통해 조직의 실제적인 운영에 돌입함

- 정착단계에서는 SOC사업을 통한 인프라를 향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의 합의와 사업을 통한 청년인구의 유입방안, 지역주민 간의 협력을 도모함

Ⅱ 교육문화형 사업추진 모델(안) Ⅱ

구분	주요 활동
준비단계	- 교육문화 관련기관(학교, 보육시설 등), 기존의 단체 방문,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관련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교육문화 단체 선정 - 입지조건과 구성원을 고려하여 설립지 물색 및 결정,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실행단계	- 준비단계에서 계획한 지역과 조직의 종류, 운영방식 등을 선택 - 지역으로의 이주 및 단체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처리 수행 - 정부의 교육문화 관련사업, 지원정책 등을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
활성화단계	- 준비 및 실행단계에서 계획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직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등 자문 - 조직운영과 관련된 전문교육 훈련 및 실제적인 단체의 운영 돌입
정착단계	- 지역주민의 교육 및 문화환경을 정착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기존 주민들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 및 복지과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등 수행

- 위 표의 교육문화형의 사업추진 모델(안)은 준비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4단계로 구상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준비단계에서는 지역에 부족한 교육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비롯한 기존 조직의 방문, 면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함
- 실행단계에서는 지역과 조직의 종류, 운영방식을 선택하여 지역의 교육문화시설 또는 단체의 설립을 위한 행정처리를 수행하여 정부의 교육문화 관련사업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사전 매칭이 필요함
- 활성화단계에서는 준비 및 실행단계에서 계획한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의 교육문화 관련 사업 지원과 함께 조직을 운영하고 관련 전문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통해 실제적인 단체의 운영에 돌입함
- 정착단계에서는 조직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정착시키고 기존 주민들과의 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IV 시군 공모사업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 시군 공모사업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지역의 자원, 인구, 마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형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모사업은 자원과 공모사업의 추진 효율이 떨어지고 사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시군 공모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아래와 같이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가지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3장에서 분류한 유형별로 공모와 제안방식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 공모 신청을 대상으로 시군과 청년귀촌 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제안을 병행
 - 시군, 도, 귀촌인, 농어민, 유관단체 등 필요 사업 구상 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도 사업 부서별로 우선적으로 사업성을 검토
 - 분류된 유형을 토대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
 - 기존의 정부 관련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청년 귀촌과 관련되고 청년층으로 제한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
 -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부 반영하도록 함
- 한편, 3장에서 분류한 유형을 실제 공모사업에 적용하여 추진 시 유의할 사항은 어떤 마을이 어떠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여 지역 또는 마을의 유형을 광역단위에서 지정하거나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함

- 각 지역 또는 마을의 특성, 필요한 것은 해당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임. 따라서 유형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한 후 지역 사회(주민조직, 마을 등)가 스스로 필요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시군 공모사업 기본 방향

경북형 청년 귀촌 모델

청년층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귀촌 모델 수립

청년
신농업형

협동
경제형

지역
재생형

청년
SOC형

교육
문화형

경제 기반

인프라 기반

2. 시군 공모사업 추진 방향

사업개요

- 사업명 : 마을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청년 귀촌 사업
-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총사업기간 : 2020~2023년(4년간)
 - 총사업비 : 121.4억 원(민자 제외)

【 시군 공모사업 개략 사업비 산출내역 】

유형	지원사업명(예)	개소 (시군)	개소당 사업비 (백만 원)	사업비 (백만 원)
청년신농업형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1,500	3,000
협동경제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3	500	1,500
지역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2	2,000	4,000
청년SOC형	생활밀착형 SOC사업	3	1,000	3,000
교육문화형	문화마을 조성사업	2	320	640
총사업비				12,140

* 총사업비는 기존의 정부지원사업의 개략적인 사업비에서 산출한 것으로 실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기간과 범위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내용 : 감소하는 청년인구에 대응하여 마을단위 청년인구의 이주와 청년 일자리창출 및 주거·인프라·교육·문화 등의 복지 지원
- 사업유형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체가 청년인구 감소를 극복하도록 하고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을 5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추진
 - ① 청년신농업형, ② 협동경제형, ③ 지역재생형, ④ 청년SOC형, ⑤ 교육문화형
 - 단순한 시설건립과 확충사업은 배제하고 청년 귀촌에 필요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지원에 중점
 - 중앙부처에서 지원하지 않는 청년 귀농·귀촌 사업의 영역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 * 마을(또는 읍면)단위 청년층 감소에 대한 진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역의 특수성 및 자원에 대한 진단 등 선행분석이 필요함

사업유형별 지원 내용

유형	지원 내용
청년신농업형	- 청년 귀촌을 위한 주거(빈집수리, 기존 농가와의 연결 지원) 농지(유휴농지 등의 임대, 매입 등의 연결 지원), 귀농교육, 영농정착지원금(연차별 차등하여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또는 용자 지원) 등 청년이 마을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
협동경제형	- 청년층이 중심이 되어 협동경제의 범위(마을기업, 영농조합, 사회적기업 등) 내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 심사과정, 사업수행과 관련된 전반에 대한 지원 * 협동경제의 각각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앙부처별로 시행중이므로 도 자체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역재생형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읍면 단위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제한하여 시행 * 예)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마을 공동서비스 운영, 지역자산 조사 등을 포함한 재생계획 수립, 주민 소식지 발간 등의 지원
청년SOC형	- SOC사업인 관계로 읍면 단위 신청을 원칙으로 하여 청년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고 지역에 부족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에 대한 지원 * 예) 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 등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교육문화형	- 청년층과 청년층 자녀들에 필요한 교육문제와 문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설립(교육협동조합, 기존 학교와의 방과후 돌봄사업 연계 등)과 지역의 자원(관광자원, 지역의 역사문화 발굴 등)을 이용한 마을의 문화사업 등의 추진

추진방식

- 사업 공모방식
 - 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북 내 시군에서, 지역 내 청년 귀촌 사업의 희망지역을 선별하여 시군 당 1~2개소 이내로 신청 접수
 - 사업 신청 대상 : 행정구역 상 마을(리 단위), 인접해있는 다수의 마을의 연합(신청일 기준으로 단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읍면동(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구 20% 미만의 읍면동)
 - * 경북도내 읍면동 구역의 각각 20~39세 인구 비율은 도(26.00%), 읍(27.18%), 면(14.99%), 동(30.41%)로 도 평균과 면 평균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위 기준으로 신청대상을 정할 경우 일부 읍, 동 지역도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지역선정
 - 경북형 청년 귀촌 사업의 지역적인 범위는 경북 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소멸 지수가 높은 7개 시군(의성,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과소화마을* 비율이 높은 시군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적으로 선정함

* 과소화마을이란 마을의 가구수가 20호 미만인 마을을 말하며,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경북의 과소마을 수는 112개로 경북 전체 마을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 경북형 청년 귀촌사업의 선정지역은 특히 청년의 인구유출,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문제, 소득저하,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제외지역 : 최근 10년간 청년층(20~39세) 인구 증가지역, 기존 중앙부처/경북도 청년 귀촌, 귀농, 어촌 뉴딜 사업 등의 지원 실적이 있는 시군 제외
- 평가방법
 - 민·관·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형 청년 귀촌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기타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함
 - 서류심사는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 등 요건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실사는 지역의 추진의지와 사업의 실제 수행능력 여부 등을 심사함
 - 경북형 청년 귀촌사업 선정위원회는 공정성 등을 고려, 내부위원 3명 이내, 외부위원 5명 이내로 하여 총 8명 이내로 구성
 - 평가비용 : 서류심사 50%, 현장실사 50%, 가점(총점의 10% 이내)
 - 평가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 접수된 지역을 평가하여 사업 선정지 후보군을 3배수 이내로 선정한 뒤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함
- 평가기준(안)
 - 경북형 청년 귀촌 사업의 평가 기준은 크게 사업추진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확립여부, 향후 운영관리의 지속 가능 여부,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함
 - 청년 귀촌 사업은 감소하는 청년인구에 대한 주민조직의 자체적인 합의, 추진 주체의 설정, 사업 종료 이후 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해 주요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음
 - 대규모 시설사업보다는 마을단위에서 마을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의 사업위주로 추진하여 이를 평가함
 - 평가 기준별 배점은 총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청년 인구 문제가 심각한 7개 시군과 과소화마을에 대해서는 각 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이 부여된 경우에도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경북형 청년 귀촌 사업 평가 기준 ▣

선정기준		내용	배점
사업추진 타당성	필요성	지역의 청년 인구감소 정도가 심각하여 청년 인구대책이 필요한 지역인가?(12)	30점
	적절성	지자체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인구 감소와 귀촌 문제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였는가?(6)	
	부합성	사업 목표와 방향이 공모사업에 부합하는가?(12)	
추진체계 확립여부	추진주체	마을공동체 등 주민조직의 역량이 충분한가?(7)	20점
	추진의지	기초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지원의지(6)	
	주민참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가 활성화 되었는가?(7)	
추후 운영관리 지속가능 여부	운영관리	사업 지원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었는가?(20)	30점
	민관협력	지역주민, 전문가, 청년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는가?(10)	
사업 효율성	효율성	지역의 청년 유입,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10)	20점
	지속가능성	모범사례로서의 가능성과 해당지역의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가?(10)	
가점		인구소멸지수 상위 7개 시군(5) 가구 20호 미만 과소화마을(5)	10점
계			100점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성공요인

- 마을단위 및 과소화 마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관리
 - 마을단위의 성공적인 공모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통계, 특히 심각한 인구 문제를 보이고 있는 과소화마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함
 - 충남에서는 이를 과소화마을 또는 한계마을로 정의하여 지속적으로 행정리, 자연마을 단위의 소지역 공간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에 힘쓰고 있음
 - 전북에서도 농촌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과소화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과소화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내부의 협조체계와 민간역량 네트워크가 협업하는 융합행정을 구현하고 있음

- 정부지원 사업, 기존 사업과의 연계 검토
 - 경북형 청년 귀촌 사업에 선정 지역에 대해 기존의 사업, 시행하였던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필요할 것임
 - * 여기서 말하는 연계란 중앙부처 사업과의 매칭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유사한 사업의 잘된 점과 보완할 점을 신규 사업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어 교육문화형의 경우 경북에서 2018년 시행하였던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사업의 내용 등을 일부 연계하여 기존 사업의 잘된 점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청년 귀촌사업에 시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전문 컨설팅 조직 운영
 - 경북형 청년 귀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상당수의 사업에서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의 추진 진행 간 컨설팅 조직을 사전에 구성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주민, 청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북형 청년 귀촌 사업의 전문 컨설팅은 획일적인 사업 컨설팅을 지양하고 세부사업별로 연계하여 특화된 컨설팅이 필요할 것임
 - 정기적으로 사업 대상지, 대상 조직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고, 지역의 전문조직 또는 활동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력하여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경북형 청년 귀촌 사업의 세부 추진전략 ▣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귀촌 교육 (수시)	- 교육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광역시/기초
	↓	↓
	- 신규대상 필수교육(입문, 심화) 운영 - 2차년도 이후 신청 대상에 대한 전문교육 운영	지원기관 등
↓	↓	↓
공모	- 청년 귀촌 사업 공모 및 신청 접수	광역시
↓	↓	↓
적격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성 검토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기초
↓	↓	↓
심사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광역시
↓	↓	↓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사업관리 모니터링	기초-광역시
↓	↓	↓
점검 및 평가	- 현장점검 후 결과제출 - 사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조직의 경우) 재무재표 제출 - 지원 보조금 정산결과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기초-광역시 선정자-기초 선정자-기초 기초-광역시

▣ 참고문헌 ▣

- 경상북도, 2018, 2018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운영지침.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2017, 민간자본보조사업 2017년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2018,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 김기태 외, 2017,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 김기홍, 2016,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
- 김정섭 외, 2015,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외, 2017,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24 No.1(March 2017), 33-48.
- 김정섭 외, 2017,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17,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 박대식 외, 2014, 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12.
- 성주인 외, 2003, 지역유형 구분과 농촌지역의 유형별 특성, 농촌경제 제26권 제2호(2003 여름).
- 정희훈, 2018, 지역쇠퇴 방지, 농촌지역 과소마을 대책 수립부터, 대경 CEO Briefing 제541호, 대구경북연구원, 2018. 5. 15.
- 통계청, 2017,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한국고용정보원, 2018, 고용동향 브리프, 2018. 7.